



KDI FOCUS

2015년 4월 29일(통권 제54호)

자료문의 | KDI 홍보팀

주소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Tel 044-550-4030

Fax 044-550-0652

집필자 | 김희삼 연구위원(044-550-4098)

KDI FOCUS는 시의성 있는 경제·사회적 이슈를 간략하게 정리한 시론 성격의 자료

Korea's Leading Think Tank

www.kdi.re.kr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김희삼 | KDI 연구위원

“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이 높았던 한국 사회에 상향 이동 가능성과 노력의 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이 강화되고 교육격차가 확대되면서 교육의 사다리 역할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재능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한 조기개입과 적극적 시정조치, 다양한 성공 경로를 추구할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개혁, 불리한 배경을 가진 청년의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한 시기이다. ”

I. 문제의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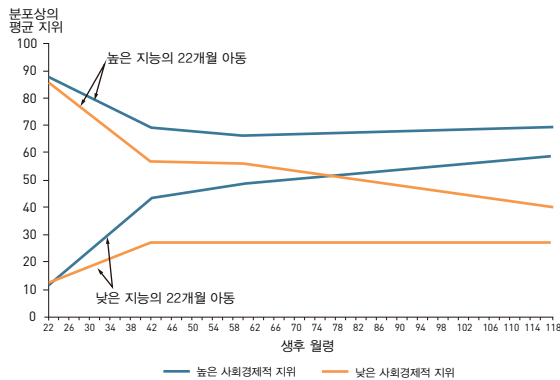
1. 왜 사회 이동성이 중요한가?

사람들은 카스트(Caste) 제도와 같이 엄격하게 구분된 계급이 세습되는 사회에 살고 싶어 할까?

물론 자신이 어떤 계급으로 태어나는가에 따라 답은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이 낮은 사회는 미래가 밝지 않다. 개인이 처한 환경이 나쁘면 노력해도 성공하기 어려

* 본고는 김희삼(2014)의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하고 보완을 거친 것임.

[그림 1] 22개월~10세 아동의 인지능력 발달과 사회경제적 배경의 관계



자료: 1970년생 영국 아동을 추적 조사한 자료(1970 British Cohort Study)를 이용한 Feinstein(2003)의 연구에서 인용.

**낮은 사회 이동성은
형평성과 함께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성장을 저해**

운 사회에서는 현존 계층질서가 도덕적으로 수용되기 어렵고 반목과 위화감이 커지며 다음 세대에서도 희망을 갖기 어려워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이 저해된다.¹⁾ 또한 타고난 잠재력이 어려운 환경에 의해 사장되고, 능력이 부족한 상속자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올라 인재의 적재적소 활용이 저해될 수 있다. 이처럼 낮은 사회적 이동성은 형평성은 물론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천부적인 인지능력은
성장과정에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달**

그런데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공정한 사회를 논할 때 사람들은 천부적인 능력의 차이는 인정할 수 있지만 후천적인 환경의 차이에 의한 불리함은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는 경우가 많다(Corak[2013], p.98).

실제로 양육환경의 차이는 인지능력의 발달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Feinstein(2003)은 생후 22개월에 인지능력이 상위 10% 수준이던 저소득 가구 아동은 성장할수록 인지능력의 상대적 위치가 하락한 반면 인지능력이 하위 10% 수준이던 고소득 가구 아동의 인지능력은 점점 향상된 것을 발견했다. 결국 [그림 1]에서처럼, 천부적 인지능력과 무관하게 10세 무렵에는 좋은 환경을 가진

**최근 세대 간 상향 이동에
대한 비판론이 확대되고
노력의 힘에 대한 믿음이 약화**

아이의 높은 지능과 나쁜 환경을 가진 아이의 낮은 지능으로 양분되어 수렴해 간다는 것이다. 만약 모든 가구의 아동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과 능력 계발을 촉진하는 양질의 교육적 투입이 주어진다면 그 사회는 천부적 능력이 한껏 꽃피는 장면과 늦게 피어난 꽃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2. 지금 한국 사회에서 왜 사회 이동성이 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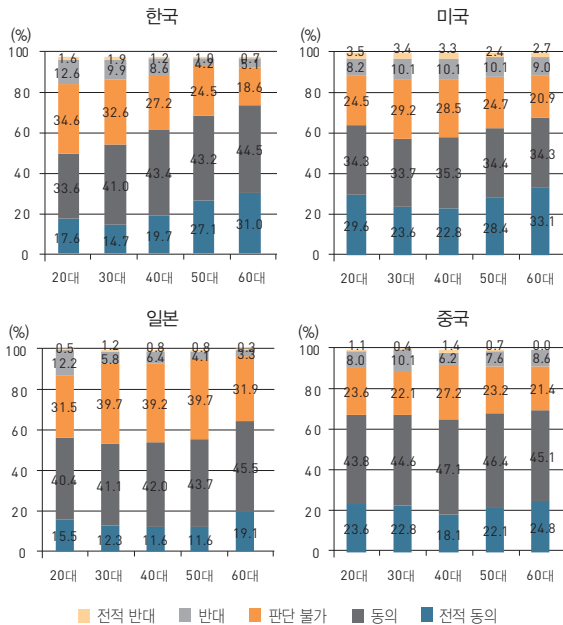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본인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인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청 ‘사회조사’의 이 질문에 대해 1994년 조사에서는 ‘비교적 낮다’와 ‘매우 낮다’를 합친 부정적 응답이 5.1%에 불과했는데, 1999년에는 11.2%, 2003년에는 19.8%로 증가했다. 답변 중 ‘모르겠다’가 제외된 2006년 이후만 보더라도 부정적 응답 비율은 2006년 29.0%, 2009년 30.8%, 2011년 42.9%, 2013년 43.7%로 최근 들어 세대 간 상향 이동에 대한 비판론이 확대되고 있다.

사회 이동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가늠하는 또 다른 방법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는 것이다.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운이나 연줄보다 노력이다.” 2013년 ‘KDI 행복연구’ 조사에 포함된 이 항목에 대한 긍정적 응답(찬성 및 전적 찬성) 비율은 60대에서 75.5%인 데 비해 20대에서는 51.2%로 젊은 세대일수록 노력의 힘에 대한 믿음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도성장과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많은 한국의 고령층은 일본, 미국, 중국 등에 비해 노력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 강한 편이었지만, 젊은 층은 회의적인 시각을 다른 나라보다 강하게 드러냈다(그림 2).

계층적 상향 이동 가능성과 노력의 힘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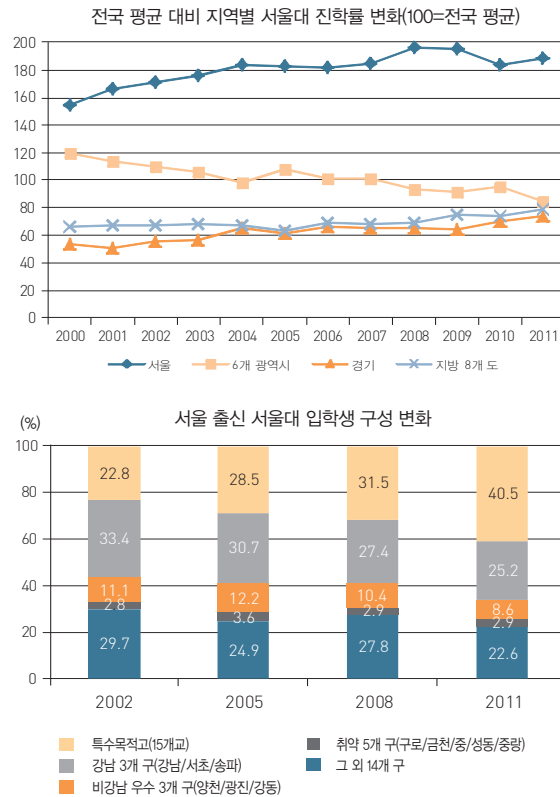
1) OECD(2011)는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의 3요소로 ①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취약계층을 배제하지 않는 것), ②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신뢰와 시민참여), ③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 지위 이동의 가능성과 믿음)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림 2] 성공을 위한 노력의 힘에 대한 믿음의 연령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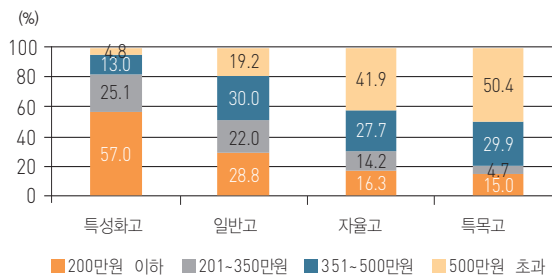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 'KDI 행복연구 2013' 자료, 일본, 미국, 중국은 오사카 대학 GCOE 2012 자료를 이용해 필자가 작성.

[그림 3] 누가 서울대에 많이 가게 되었는가?



자료: 국회 자료, 「고교별 서울대 입학생 수」, 각년도(김영철[2012]에서 재구성).

[그림 4] 서울지역 고 1 학생의 학교 유형별 가구소득 분포



자료: 서울교육중단연구(SELS) 2010년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계산함.

부정적 인식의 근거는 무엇일까? 가난한 집 학생이 명문대에 진학하면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표현해 온 것을 고려하여, 그동안 상징적 의미를 지녀 온 서울대 입학생 구성의 추이를 한 가지 예로서 살펴보자. [그림 3]은 서울대 진학률에서 타 지역과 서울의 격차가 벌어지고, 서울 내에서도 특목고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해 온 것을 보여준다. [그림 4]에 나타난 고교 유형별 가구소득의 체계적인 차이를 보면 계층적 지위가 교육을 통해서도 세대 간에 재생산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²⁾

II. 한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의 상승과 하락

1. 한국은 평등한 기회의 나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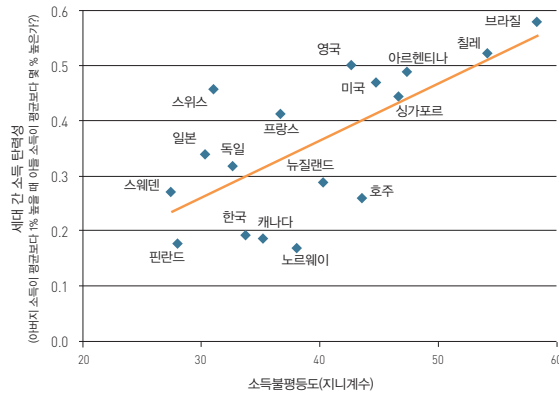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반세기 만에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를 이루면서 남미와 같은 높은 소득불평등을 노정하지 않은 모범적인 사례로 회자된다. 한 세대의 소득불평등은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와 상속을 통해 다음 세대의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림 5]에서도 소

명문대 진학률에서도
계층 및 지역 간 격차가 심화

2) 김세직(2014)은 고교 유형별 및 지역별로 매우 큰 차이가 나게 된 상위권 대학 진학률의 한 원인으로 대학입학전형에서 부모의 경제력과 큰 상관없이 학생 본인의 잠재력과 노력으로 결정되는 '진짜 인적자본'을 평가하는 선별기능이 약화됐을 가능성을 지목했다. 부모의 투자로 법재를 수재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면 국가적 인재 활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의 공정경쟁 약화가 1990년대 말 이후 경제성장을 하락과 교육 효율성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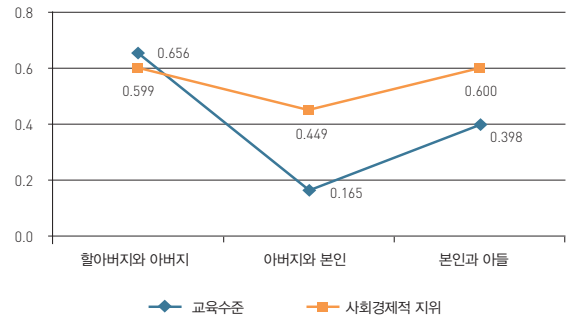
[그림 5] 소득불평등과 경제력 대물림의 관계
(The Great Gatsby Curve)



주: 필자가 사용한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아들 표본의 평균출생연도가 1976년인 점을 고려하여 교육투자가 집중되는 중학교 입학부터 대학 졸업 시기인 1990~2000년 사이의 지니계수의 평균을 사용함.

자료: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은 Corak(2013)을 참고한 것이며, 한국의 경우는 한국노동패널 1998~2012년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계산한 부자간 임금 탄력성임. 소득불평등도는 UNU-WIDER's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를 사용하여 계산한 1990~2000년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평균치임.

[그림 6]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상관계수 추이



주: 교육수준은 학력별 교육연수이며, 사회경제적 지위는 해당 가족이 중년(40~50대)인 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세대의 전체 한국인과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인 위치로서 응답자가 10점 척도로 평가한 수치를 나타냄.

자료: 'KDI 행복연구 2013' 자료(남성 응답자 1,525명 표본)를 이용해 필자가 계산함.

등을 통해 사회적 위계의 변화 공간이 열린 가운데 계층을 초월한 교육열과 공교육 확대, 고속성장 등에 따른 일자리 공급, 그리고 평준화와 사교육 억제 등의 정책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김희삼[2009]). 보편적 교육기회의 확대는 세대 간 교육수준의 상관성을 낮추어 [그림 6]에서처럼 부자간 학력 상관계수가 성인(20~69세 1,525명) 남성 응답자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간에는 0.656에 달했으나, 아버지와 본인 간에는 0.165로 급락하게 만들었다. 주관적으로 평가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부자간 상관계수도 해당 세대에 걸쳐 0.599에서 0.449로 낮아졌다.

그런데 본인과 아들의 부자간 학력(학업을 마친 성인장남 229명 기준) 상관계수는 0.398로 다시 높아졌고, 사회경제적 지위(가상적 아들 포함 1,525명)의 상관계수도 0.6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본인의 조부로부터 아들까지 4대에 걸친 시기의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이 본인에 이르기까지는 낮아졌다가 다음 세대에 도로 높아지는 U자형 추이가 보고된 것이다.

[그림 7]에서 남성 응답자를 연령대별로 구분해 사회경제적 지위의 부자간 상관계수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도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의 상승시대가 지나고 하락세로 반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간의 상관계수는 고령층에서 청

현재 중년 세대의 소득은 부모의 영향이 크지 않았으나 소득불평등과 사교육 경쟁이 심화된 상황은 세대 간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가 높은 나라에서 경제력 대물림(세대 간 소득 탄력성, 즉 아버지 소득 1% 상승에 따른 아들 소득의 상승률)이 강한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1990년대(까지)는 소득불평등이 심하지 않은 편이었고, 이 시기에 중·고등 교육을 받은 아들 세대(2015년 현재 평균 40세)의 소득에 대한 아버지 소득의 영향력도 상당히 낮게 측정됐다. 이에 따라 [그림 5]에서 한국은 남미나 영미보다 북유럽에 가깝게 소득분배도 비교적 양호하고 경제력 대물림도 심하지 않은 나라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도 2000년대 들어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졌고, 사교육 경쟁이 출산기피의 한 원인이 될 정도까지 심해졌다. 따라서 계층 간 교육격차가 커진 현재의 젊은 세대가 성인이 된 이후의 소득이 관찰될 향후에도 [그림 5]에서와 같이 한국이 여전히 사회 이동성이 높은 평등한 기회의 나라로 보일지는 미지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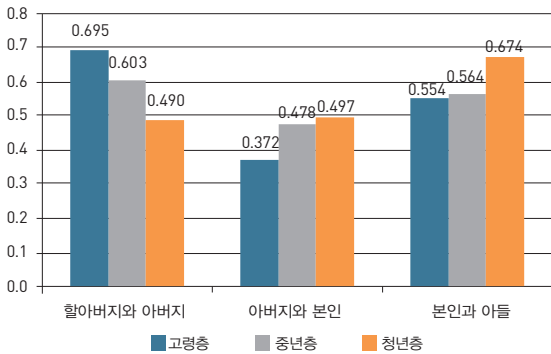
2.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은 어떻게 변해 왔는가?

한국의 사회 이동성, 특히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이 높았던 것은 신분제 철폐, 농지개혁과 전란

현재 중년 세대의 소득은
부모의 영향이 크지 않았으나
소득불평등과 사교육 경쟁이
심화된 상황은 세대 간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

고속성장기에 약화됐던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이
근간에 다시 강화되는 모습

(그림 7) 연령집단별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상관관계



주: 관측치 수는 고령층(50~69세) 509명, 중년층(36~49세) 501명, 청년층(20~35세) 515명임.
 자료: 'KDI 행복연구 2013' 자료(남성 응답자 1,525명 표본)를 이용해 필자가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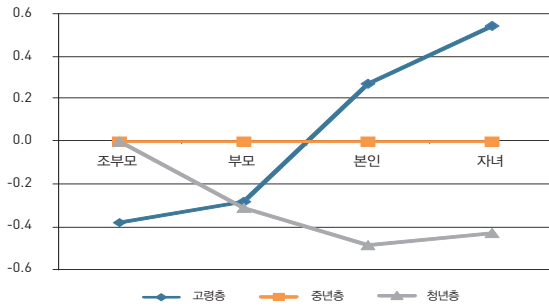
년층으로 올수록 낮게 평가됐으나, 그 이후 세대들의 부자간 상관계수는 청년층으로 올수록 높게 평가된 것이다.

3. 교육은 지금도 계층 이동의 사다리인가?

소수에게 한정되어 있던 교육의 기회가 공교육의 확충으로 보편화되고 교육이 양질의 일자리와 연결되면 교육은 가난한 집 아이에게 계층적 상향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 반면, 교육을 받아도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없고, 좋은 학교에 가려면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보다는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인식될 수 있다.

[그림 8]은 2013년 'KDI 행복연구' 설문에서 응답자의 조부모, 부모, 본인, 자녀 세대에서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각각 어느 정도인지(높은 값일수록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 조사한 결과를 응답자의 연령대별로 비교한 것이다. 중년층과 전주었을 때 고령층은 각 시대에서 교육의 사다리 역할에 대해 본인의 조부모와 부모 세대에 대해서는 더 낮은 평가를, 본인과 자녀 세대에 대해서는 더 높은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은 조부모 세대에 대해서는 중년층과 차이가 없는 평가를 했으나, 부모, 본인, 자녀 세대에 대

(그림 8) 각 세대에서 교육의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에 대한 연령대별 견해



주: 관측치 수는 고령층(50~69세) 983명, 중년층(36~49세) 993명, 청년층(20~35세) 1,024명이며, 각 세대의 교육 사다리 역할에 대한 중년층의 평가를 기준(0점)으로 할 때 고령층과 청년층의 평가가 보여주는 통계적 차이를 나타낸 것임.
 자료: 'KDI 행복연구 2013' 자료(전국 성인 남녀 3,000명)를 이용해 필자가 계산함.

해서는 교육의 사다리 역할에 대해 보다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살펴본 계층적 상향 이동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의 증대, 노력의 힘에 대한 회의론의 증대 등과 상통하는 결과로서, 현 사회에서 교육이 과거와 같은 '위대한 균형추(the great equalizer)'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짙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III.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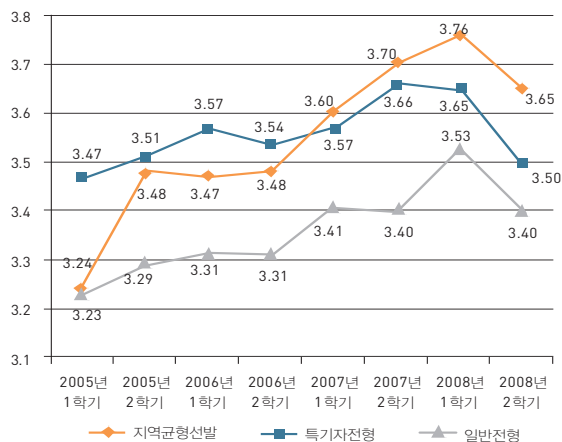
저성장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한국 사회가 정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타고난 재능이 사장되지 않고 계발되어야 하며, 다양한 흥미와 적성에 맞게 공부하며 노력하면 여러 경로를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야 하며, 사회적 배제 집단이 생기지 않고 인적자원이 최대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1. 재능 사장의 방지

수능점수가 사교육을 통해 보다 쉽게 향상될 수 있다면 객관적 점수에 근거했다고 해서 반드시 인재 선발이 공정하고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교육환경이 양호하고 사회지도자를 많이 배출하는 대학에 고액 사교육의 도움을 많이 받아 온 고소득층 자녀가 주로 입학하게 된다면, 원래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서
 교육의 역할에 대한 평가도
 과거에 높아졌다가
 최근에 낮아지는 모습

(그림 9) 대학 입학 유형별 서울대 학생들의 학점 변화



주: 2005년 3월 서울대 입학생 3,224명 중 지역균형선발은 659명(20.4%), 특기자전형은 426명(13.2%), 일반전형은 2,139명(66.3%)이었다. 이들 중 702명(지역균형선발 84명, 특기자전형 102명, 일반전형 516명)이 2009년 2월에 졸업했다.
자료: 백순근·양정호(2009).

잠재력이 더 높았던 학생이 우수한 교수진을 만나 만개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는 사라진다.³⁾

2005년에 서울대학교는 읍면지역 등에서 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수능점수가 다소 낮더라도 발전 가능성을 보고 선발하는 지역균형선발제도를 도입했다. [그림 9]에서처럼 이 제도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은 1학년 첫 학기에 일반전형 학생들과는 비슷하지만 특목출 출신 중심의 특기자전형 학생들보다는 낮은 학점을 보였다. 그러나 첫 지역균형선발 학생들에 대한 학교 측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4학기 정도의 조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지역균형선발 학생들이 더 높은 성적을 거두어 잠재력을 입증했다.

**조기개입과 함께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던 잠재력이
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대입전형의 적극적 시정조치와
입학 후 지원을 확대할 필요**

앞서 살펴본 교육격차의 증대 현상을 고려하면 현재 우리 사회는 인생의 초기단계의 격차 누증을 방지하기 위한 조기개입과 함께 대입전형에서의 기회균등선발 등 적극적 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국립대가 주도하고 사립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보다 중요한 부분은 대학과 사회의 인

식 전환이다.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다투어 유치하는 대학보다는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성장시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후배들에게 롤 모델이 될 인재를 길러내는 대학이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또한 입학사정관제(현 학생부종합전형)는 컨설팅 사교육 조장에 대한 비판과 객관성 시비를 극복하고, 당장은 거칠지만 훌륭한 보석이 될 원석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입학사정관의 역량 강화와 서류심사를 넘어선 적극적 사전 발굴(outreach), 선발한 학생에 대한 책임 있는 적응 지도 등 사후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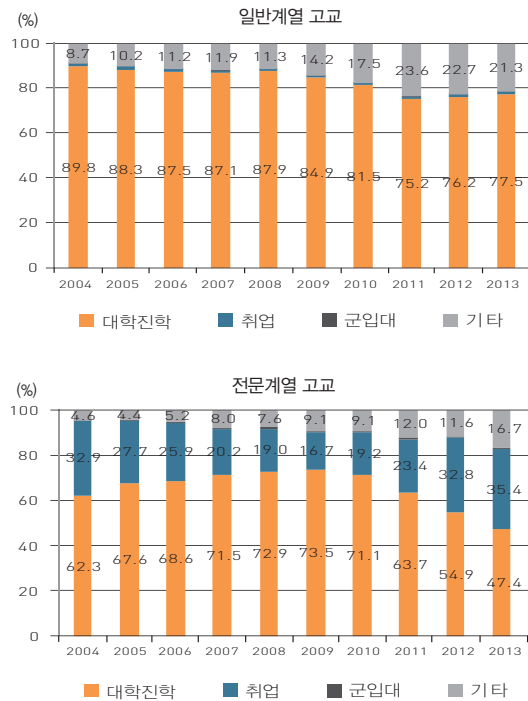
2. 성공 경로의 다양화

고교 졸업 직후의 대학진학률이 일반계 고교는 89.8%, 전문계 고교는 73.5%까지 높아졌으나 최근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3년에 각각 77.5%, 47.4%까지 떨어졌다(그림 10). 마이스터고 도입, 일·학습 병행제, 선취업·후진학 장려 등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의 영향도 있겠지만, 대졸자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도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

임금과 고용 안정성의 격차가 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것은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의 정규직이 되는 것 이외의 성공 경로를 찾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노동의 공급 측면에서도 다양한 성공 경로를 모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고교 교육과정의 개인의 적성과 진로계획에 맞춰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획일화된 내용으로 기존의 주입식 수업을 고수하는 것은 교실에서 자는 학생을 양산하고, 미래를 준비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다. 학교에서 저마다 몰입할 수 있는 맞춤형 선택과목(예체능 실기 및 직업교육 포함)을 더 많이 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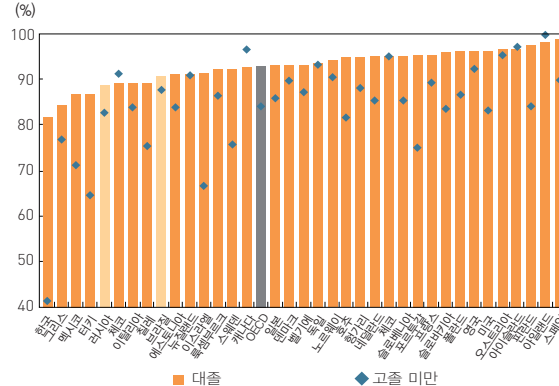
3) 교사, 교수, 연구원 등 교육전문가에 대한 한국교육개발원의 2011년 조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명문학교에 갈 수 있다.”에 대해 68%가 부정적으로 응답했고, 젊은 응답자일수록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20~30대 83%, 40대 71%, 50대 58%), 교육계 종사자에게서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회의론이 짙어져 가는 것을 드러냈다(류방린[2011]).

[그림 10] 고교계열별 졸업 후 진로의 추이



자료: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데이터로부터 필자가 계산함.

[그림 11]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적 네트워크의 차이



자료: OECD(2013), 원자료는 갤럽의 세계여론조사임.

태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젊은 세대의 평균교육수준이 과잉교육을 염려할 정도로 높아지면서 저학력자의 사회적 소외나 배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00~13년간 30~34세 남성 중 고졸 미만의 고용률은 84.9%에서 60.4%로 가장 크게 하락했다. 취업경쟁에서 밀리고 빈곤과 범죄에 빠질 위험에 노출된 저학력 청년 니트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중퇴를 막고 자립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일자리를 찾는 데는 개인의 인적 배경에 의한 네트워크가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인맥에 의한 채용 빈도는 60% 내외였고(김영철[2011]), 미국에서도 직업의 절반 이상은 가족, 친구, 지인을 통해 구해졌다(Loury[2006]). 그런데 한국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는 학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지나 지인이 있다.”는 비율이 [그림 11]에서처럼 고졸 미만 학력에서는 41.6%로 대졸(81.8%)의 절반에 불과했다. 한국인의 사회적 고립감이 전반적으로 강한 편이지만, 학력별 격차가 특히 강하게 나타난 점은 한국 사회에서 학맥의 힘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다는 것의 방증이며, 이것도 대학진학을 중시하는 풍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성공 경로를
모색할 역량을 기르는
교육 시스템의 변화,
특히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교수법의 혁신이 필요

하고 프로젝트 수행을 늘려 다음 단계의 교육과 취업을 위한 역량을 기르는 것은 ‘교실 붕괴’라는 말까지 나오게 한 공교육의 현실을 타파할 대안이다. 이를 위해 교직 개방 등 교원 수급정책의 개혁,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중심으로 한 고교 시스템의 개혁, 그리고 동기와 창의를 유발하는 교수법의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3. 사회적 배제의 예방

배우지도 일하지도 않는 청년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29세 남성 중 니트 비율은 1995년 2.4%에서 2013년 11.8%로 증가했고, 30~34세 남성도 같은 기간 1.0%에서 5.9%로 니트가 늘었다. [그림 10]에서도 2013년의 경우 일반계고 졸업생의 21%와 전문계고 졸업생의 17%가 진학도 취업도 입대도 하지 않은 상

**기초학력 보장과
취업능력 배양 및
공공고용서비스 확충은
불리한 배경을 가진 청년의
사회적 배제를 막고 인적자원
활용도를 높이는 길**

연줄의 계층 간 불균등성을 고려할 때 연줄의 힘이 강한 사회는 공정하지 않고, 노력할 유인이 그만큼 낮으며, 실력보다 연줄에 투자하는 행태를 낳는다. 학연과 지연으로 얽힌 인맥의 거미줄을 걷어내는 것은 사회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이다.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불리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공공고용서비스를 확충하고 직업훈련을 효

과성 있게 조준하고 내실화해야 한다. 청년 한 명 한 명이 가장 귀한 국가적 자원이 될 초저출산 급고령화 시대에 학교에서 기초학력 보장에 책임을 지며 급변하는 직업세계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것은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고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할 가장 분명한 조치일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세직, 「경제성장과 교육의 공정경쟁」, 『경제논집』, 제53권 제1호,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4, pp.3~18.
- 김영철, 「대학 진학 격차의 확대와 기회형평성 제고방안」, KDI 포커스 제23호, 한국개발연구원, 2012.
- 김영철, 「구직에서의 인적 네트워크 의존도 추정」, KDI 정책포럼 제243호, 한국개발연구원, 2011.
- 김희삼, 「한국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 분석」, 정책연구시리즈 2009-03, 한국개발연구원, 2009.
- 김희삼, 「세대 간 계층 이동성과 교육의 역할」, 김용성·이주호 편, 『인적자본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종합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4(근간).
- 류방란, 「저소득층 교육기회 및 사회진출 확대 방안」, 『교육개발』, 제38권 제1호, 2011.
- 백순근·양정호, 「지역균형선발의 성과와 과제」, 『제27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자료집』,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9.
- 서울시 교육정보연구원, 「서울교육중단연구」, 각년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한국개발연구원, 「KDI 행복연구조사」, 2013.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년도.
- Corak, Miles, "Income Inequality, Equality of Opportunity,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7(3), Summer 2013, pp.79~102.
- Feinstein, Leon, "Inequality in the Early Cognitive Development of British Children in the 1970 Cohort," *Economica* 70(277), 2003, pp.73~97.
- Loury, Linda Datcher, "Some Contacts Are More Equal than Others: Informal Networks, Job Tenure, and Wag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24(2), April 2006, pp.299~318.
- OECD,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2: Social Cohesion in a Shifting World*, 2011.
- OECD, *How's Life? 2013: Measuring Well-being*, 2013.
- Osaka University, Global COE (The 21st Century Center of Excellence Program) Preference Parameters Study, 2012.
- UNU-WIDER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 Version 2.0c, May 2008.